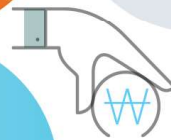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2021. 12.



kipf

본 보고서는 OECD에서 발표(2021.12.1)한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연구진

- 김우현 부연구위원
- 김은숙 선임연구원
- 이정은 선임연구원
- 배소민 위촉연구원

● 목 차 ●

I. 거시경제 전망 및 평가	1
1. 서론	1
2. 불균형한 회복	4
3. 예상되는 회복	11
4. 주요 위험 및 취약성	14
5. 정책 제언	19
II.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25
1. 호주	25
2. 브라질	28
3. 중국	30
4. 유로지역	32
5. 프랑스	34
6. 독일	36
7. 인도	38
8. 이탈리아	40
9. 일본	42
10. 한국	45
11. 네덜란드	47
12. 남아프리카공화국	49
13. 스페인	51
14. 영국	53
15. 미국	55

I. 거시경제 전망 및 평가

1. 서론

■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완전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회복세는 갈수록 약화되고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저소득국가,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접촉 집약적 업종(contact-intensive sectors)은 앞으로 더욱 더디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경제재개(reopening) 후의 공급 병목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바이러스 감염의 지속적인 확산 등으로 많은 국가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
- 공급차질은 수요 정상화, 생산여력 확대, 노동시장 복귀 등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중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통화정책 기조의 이른 긴축전환,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하방리스크가 존재
- 인플레이션은 2021년 말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21년 말에 5%, 2022년 말에는 3%로 전망

■ (성장률)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5.6%에서 2022년 4.5%, 2023년 3.25%로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표 I-1> 참고)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소득국가들은 이전 수준을 수년내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저축률 감소 등에 힘입어 '22년 3.7%, '23년 2.4% 성장 전망, 지역별 백신접종 격차는 하방 요인으로 존재
 - (일본) 소비 중심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며 '22년 3.4% 성장 전망, '23년에는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며 1%대로 둔화 예상
 - (유로존)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나, EU기금 집행, 가계 저축 감소 등으로 강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중국) 최근 부동산 산업 위축, 전력난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22년 이후 5%대 완만한 성장 전망
- (인도)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낮은 인적자본 축적과 인프라 투자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I -1> 세계경제전망

(단위: %)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1 Q4	2022 Q4	2023 Q4
실질 GDP 성장률¹								
세계 ²	3.3	-3.4	5.6	4.5	3.2	3.8	3.9	3.2
G20 ²	3.5	-3.1	5.9	4.7	3.3	4.1	3.8	3.3
OECD ²	2.2	-4.7	5.3	3.9	2.5	4.4	3.3	2.2
미국	2.4	-3.4	5.6	3.7	2.4	5.1	3.0	2.3
유로 지역	1.9	-6.5	5.2	4.3	2.5	4.9	3.3	2.1
일본	0.8	-4.6	1.8	3.4	1.1	0.0	3.1	0.9
Non-OECD ²	4.3	-2.2	5.8	4.9	3.8	3.2	4.3	4.0
중국	6.8	2.3	8.1	5.1	5.1	3.9	5.5	5.0
인도 ³	6.8	-7.3	9.4	8.1	5.5			
브라질	-0.3	-4.4	5.0	1.4	2.1			
실업률⁴	6.5	7.1	6.2	5.5	5.2	5.7	5.4	5.1
인플레이션^{1,5}	1.7	1.5	3.5	4.2	3.0	4.9	3.4	3.1
재정수지⁶	-3.2	-10.4	-8.4	-5.2	-3.7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¹	3.4	-8.4	9.3	4.9	4.5	6.1	5.2	4.2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GDP의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Table 1.1.

■ (향후 방향)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고안이 필요

-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보존하며 국경을 안전하게 재개방하도록 함
- 단기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노동시장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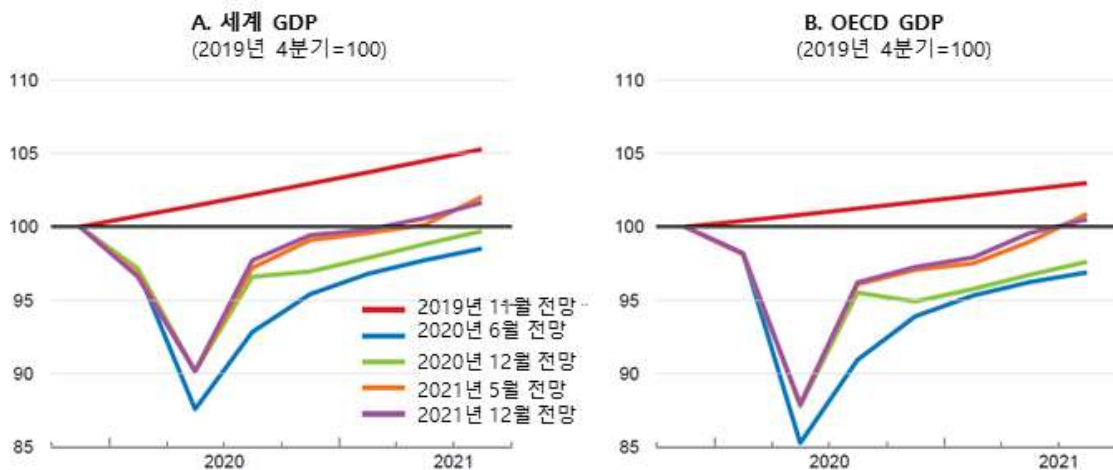
- 통화정책 또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회복세가 예상대로 진행되는 경우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조금씩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려

2. 불균형한 회복

■ 2020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생산량을 위기이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회복([그림 I-1] 참고)

○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공중보건 조치, 효과적인 백신 출시 등 위기 초기부터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속하고 대대적인 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

[그림 I-1] 세계 경제 및 OECD 경제의 회복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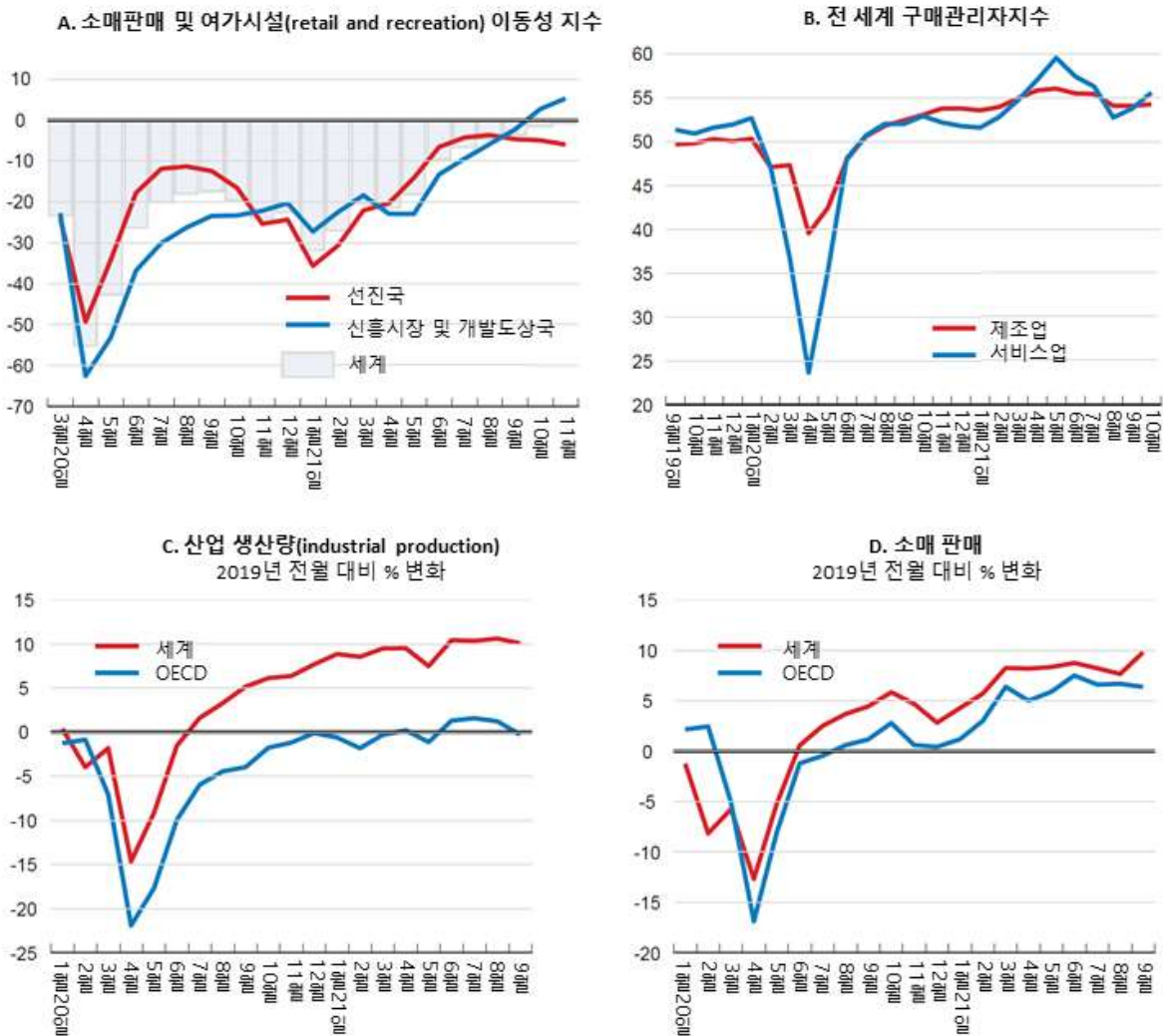
■ 중국과 미국의 성장둔화는 유럽 지역의 꾸준한 성장과 인도와 일부 에너지수출국의 반등에 의해 상쇄되면서, 2021년 3분기 세계 GDP 성장률은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

○ 델타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로 인하여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3분기 생산량은 약세를 보임

○ 고빈도 지표(high-frequency indicators)는 전반적으로 회복속도가 둔화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위치기반 지표(location-based indicators)는 신흥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그림1-2] 참고)

○ 생산량과 신규 주문에 대한 수치는 올해 초 정점을 찍은 후 다소 둔화되었으며, 전 세계 산업 생산규모는 2019년 수준을 상회함([그림1-2] 참고)

[그림 1-2] 지수별·부문별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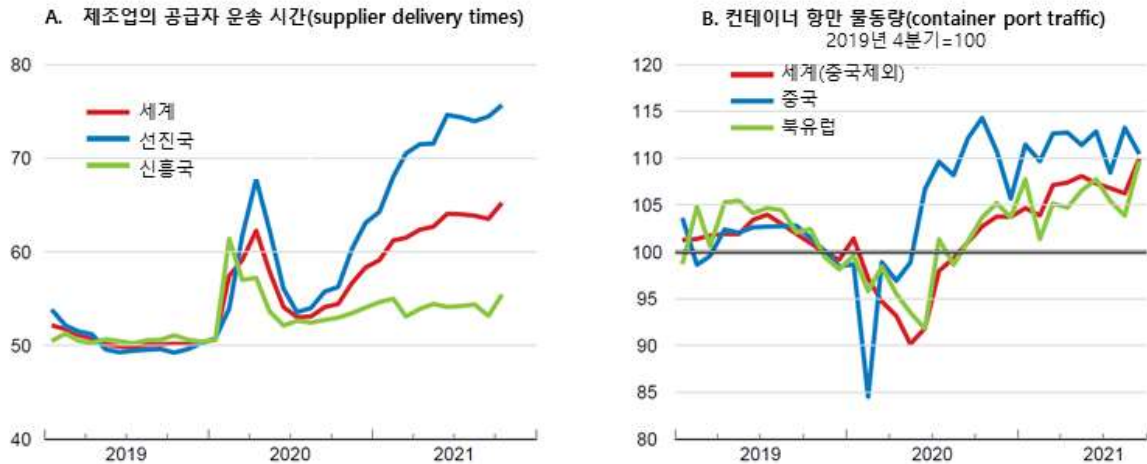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3.

■ (공급부족) 전 세계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일부 부문의 생산 능력이 더디게 회복되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함

○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섯다운은 공급차질 문제를 야기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 공급업체의 납품 시간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상승([그림 1-3] 참고)

- 코로나19로 중국의 주요 항구가 폐쇄되어 전 세계 해운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였고 컨테이너 운송에도 어려움이 발생
- 바이러스는 또한 컴퓨터칩을 생산하는 공장의 폐쇄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그 칩들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생산(특히 자동차)이 억제됨

[그림 I-3] 공급병목 현상으로 인한 운송 지연



주: 패널 A는 제조업에 대한 구매관리자지수(PMI)를 기반으로 하며, 100에서 운송시간이 동일하거나 빨라졌다고 보고한 설문 응답자의 비율을 백 값을 사용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8.

■ (노동력부족) 고용 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 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I-4], [그림 I-5] 참고)

○ 이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장소의 변화, 요구되는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며, 미국과 호주 등 일부 국가의 베버리지 곡선¹⁾은 노동수급 불균형 상태를 보임

- 반면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실시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곡선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중 노동 참여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중남미이며, 일본과 다수의 유럽 경제는 최근 분기에 팬데믹 직전보다도 높은 참여율로 회복함

- 일반적으로 국경 간 노동력 유입(cross-border inflows)에 의존하는 부문 및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20년 OECD 경제로 유입된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인구는 약 30% 감소했고, 임시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 인구 또한 급격히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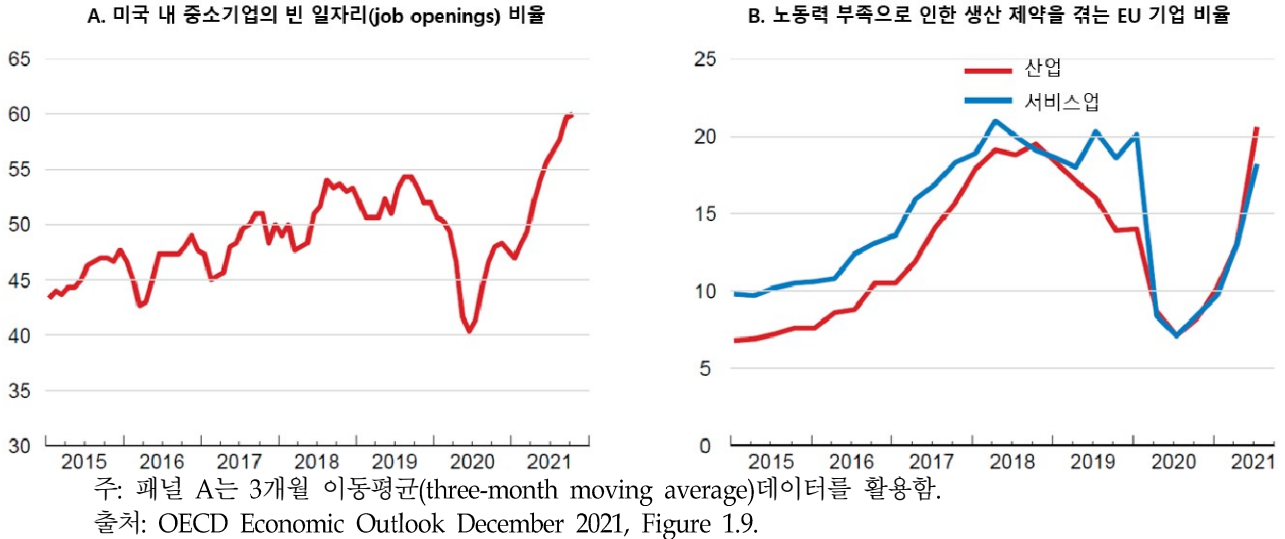
- 환대 및 여행과 같은 부문이 점차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짐

- 그러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near-term inflation expectations)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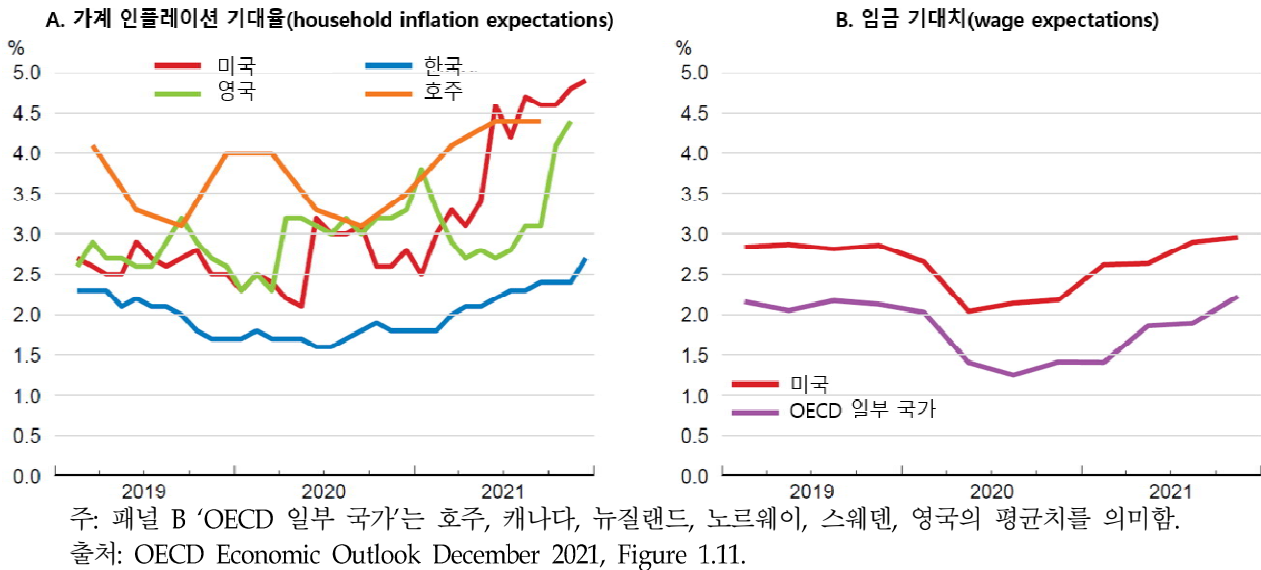
1) 노동 공급(실업률)과 수요(빈일자리율) 간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고, 기대 임금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I -4] 회복 초기 단계에 나타난 노동력 부족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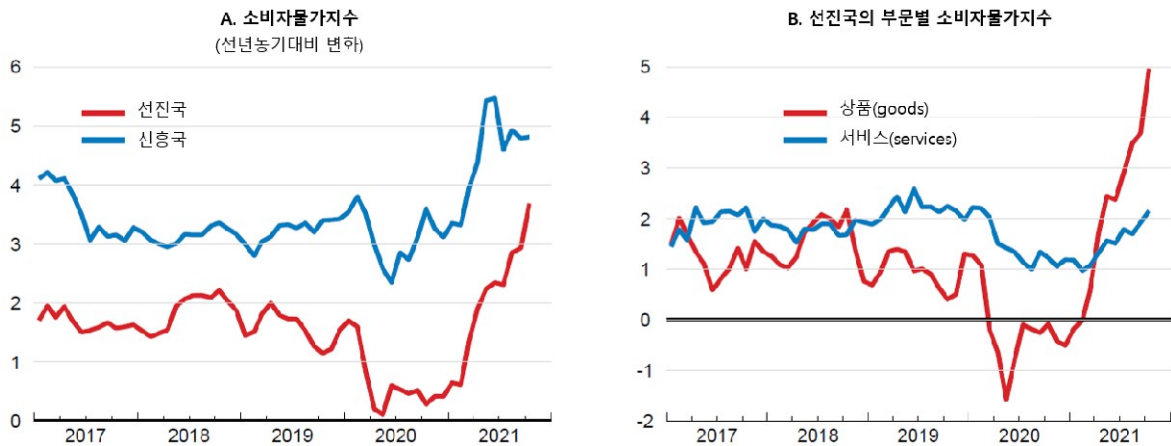
[그림 I -5]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하락하는 기대임금



- (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지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했으며, 국제유가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에 두 배 이상 상승함
- 석탄, 일부 금속, 산업 원자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으며, 최근 에너지 가격 또한 급등하여 가계지출에도 부담이 되고 있음

- 동시에 지난 1년동안 인플레이션이 현저하게 지속되었고, 물가상승 압력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에서 더욱 두드러짐
- 미국 내 소비자의 수요가 서비스에서 내구재(durable goods)로 이동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유럽 내 수요는 크지 않아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

[그림 I -6]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부문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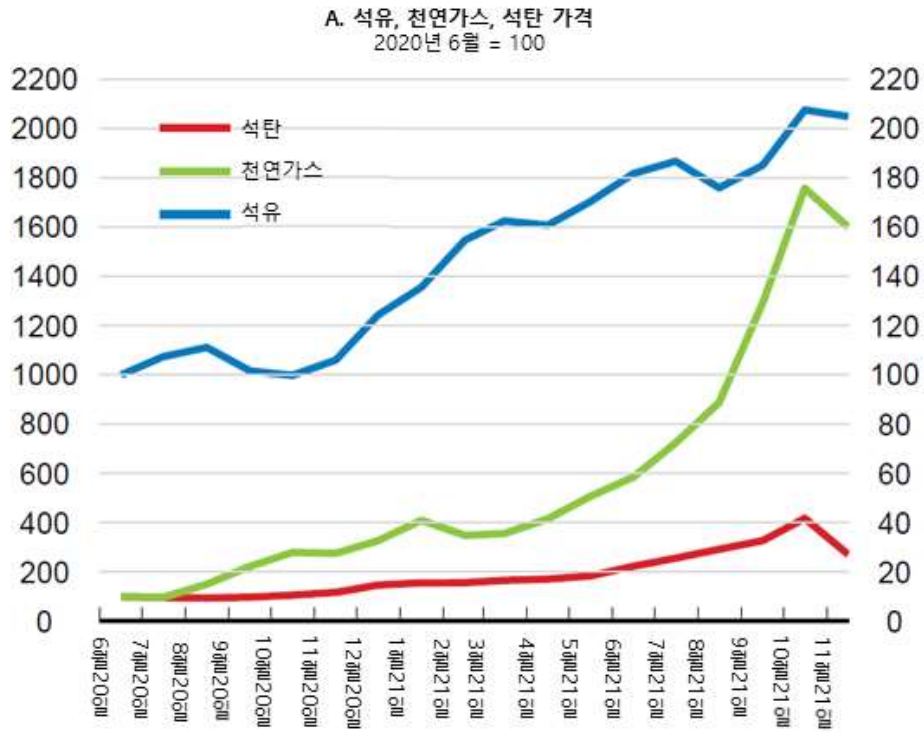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13.

[참고 1]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 2020년 중반 이후 모든 주요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
 - (개요) 팬데믹 초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2)하였으며(turned negative), 이후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브렌트유 가격은 2020년 6월 말 이후 2배 가량,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10월 초 보다 약 8배, 18배 가량 상승하였고, 이후 상승폭은 둔화됨
 - (상승 원인) 가격급등의 공통적인 요인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가 재개되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 외에도 상품 및 시장에 대한 특수성이 존재
 - 2020년 4월 OPEC+ 협정으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약 10%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1년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감산 조치 일부가 해제됨
 - 그러나 2월 텍사스 동파, 8월 허리케인 아이다 등의 영향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최근에는 2014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가가 상승

[그림 1-7] 화석연료 가격과 전력생산비용



B. 2020년 6월 이후 전력생산비용 상승에 대한 기여도



주1: 패널 A의 x축은 일일가격의 월별 평균을 의미(11월은 11월 24일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주2: 석탄가격은 호주의 FOB 뉴캐슬 5500NAR 석탄의 평균값을, 천연가스가격은 네덜란드의 TTF(title transfer facility)의 일일 선물가격을, 원유는 브렌트유의 현물가격을 의미함.
 주3: 패널 B는 원자재 가격과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력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유럽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12.

- (석탄)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 세계 석탄 생산량은 5% 감소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이후 수요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중국), 홍수(호주, 인도네시아), 철도 서비스 중단(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요인으로 공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가스) 최근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천연가스 시장의 상당한 불균형으로 국제유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PG)수요는 2020년 겨울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럽으로 수출되어야 할 가스 일부가 중국내에서 전용되고 있음
 - 유럽에서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
 - 러시아의 재고 재축적(restocking of reserves) 또한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탄소배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특히 유럽)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기여함
 - 2021년 10월 기준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나, 전력발전비용에서 가스 혹은 석탄보다도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재정상황) 최근 수 개월동안 선진국들은 대체로 양호한 금융상태를 보였으나, 신흥시장국의 경우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아래 [그림 I-8] 참고)

- 미국 채권의 명목수익률(US nominal bond yields)이 상승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는 지난 9월 자산매입을 즉시 축소하겠다는 신호를 보냄
- 그러나 11월 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월과 큰 차이가 없으며, 브라질 등 일부 신흥경제대국(large emerging-market economies)은 5월보다 1%p 상승

2) 한 예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해 5월 인도분 시장 종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에 달하기도 함

3. 예상되는 회복

■ (회복 모멘텀) 백신 2차 접종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리스크 감소,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은 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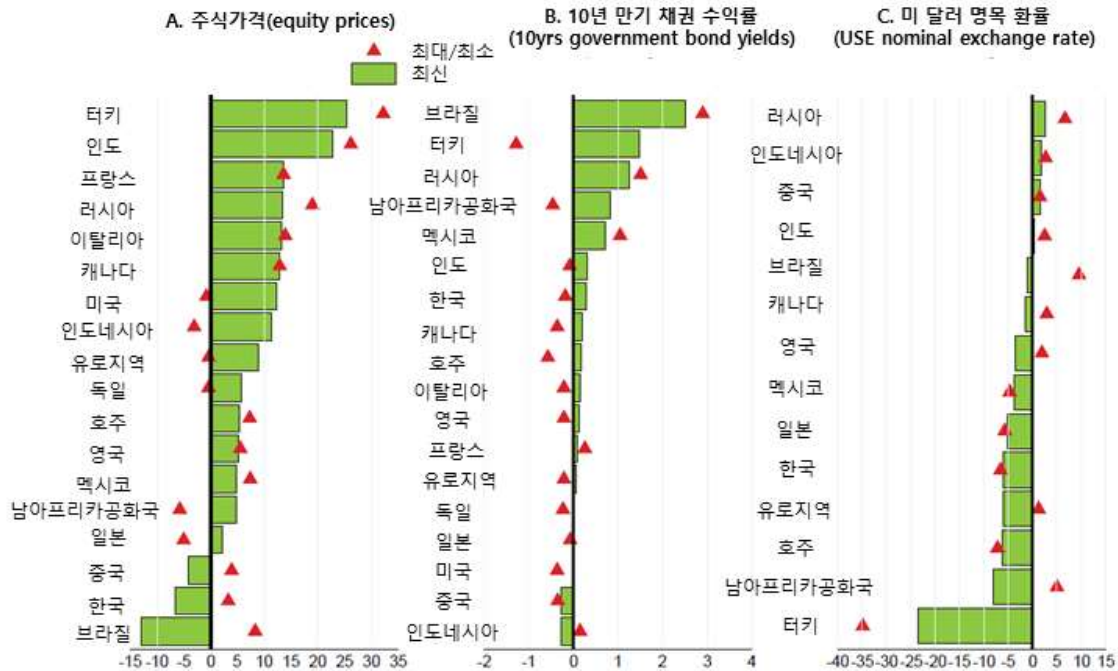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이 2022년과 2023년에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더 위험한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며, 이는 공급차질 완화, 경제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부문 회복,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생산량 증가를 이유로 경기부양책의 점진적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공급차질이 해소되면, 안정적인 재고관리 및 내수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I -8] 우호적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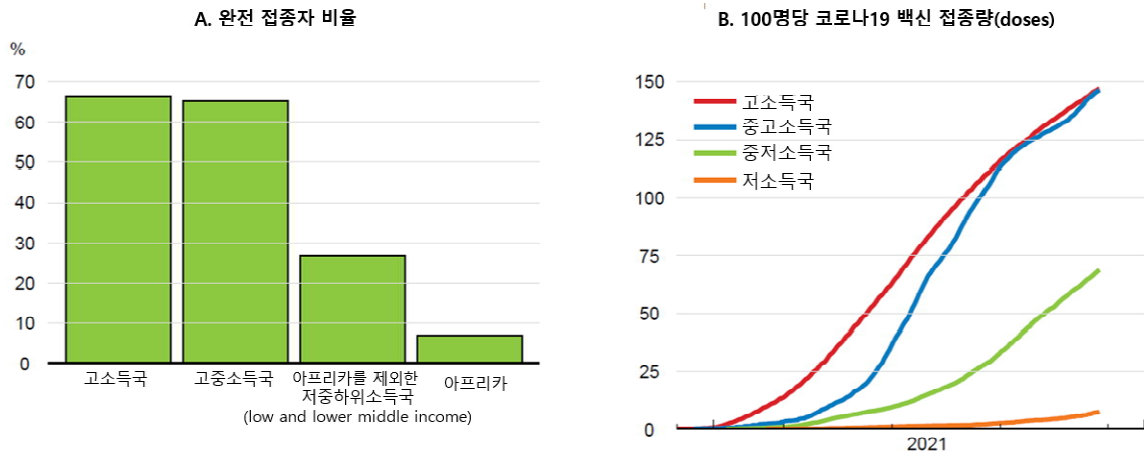
주: '최신'은 2021년 5월부터 11월 24일까지의 데이터 중 사용가능한 최신 데이터 값의 변경사항을 나타내며, '최대/최소'는 2021년 5월 이후 최대 변화를 나타냄. 수치는 10일 동안의 일일 관찰치 평균을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1, Figure 1.16.

■ (관광·노동시장 부문)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관광부문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은 2년간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관광) 많은 나라들이 국경봉쇄를 해제하고 여행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불확실성으로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부문은 부진이 계속됨
 - 백신접종률이 낮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2023년까지 관광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일부 선진국의 서비스교역(trade in service)은 회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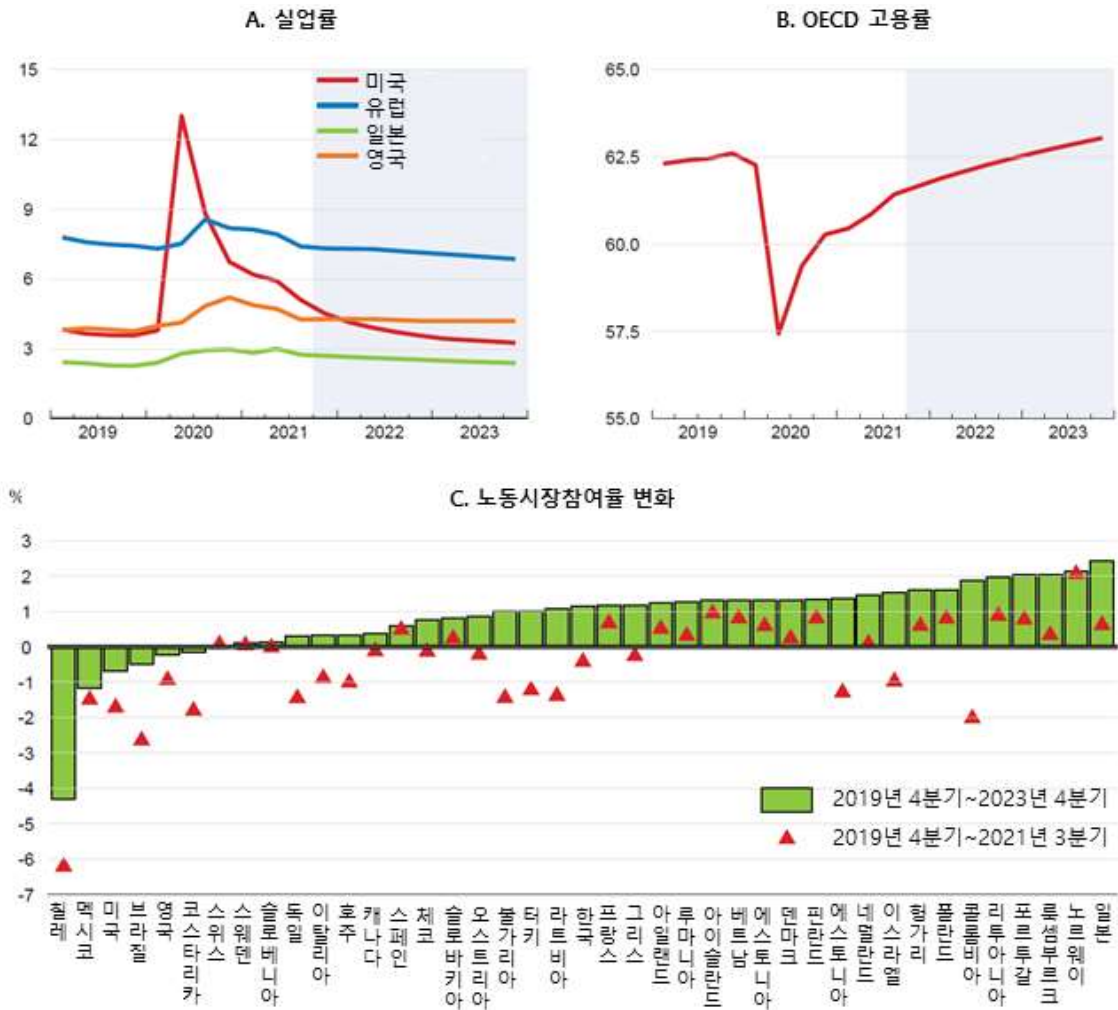
[그림 1-9]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백신 접종률 차이



주: 고소득, 고중소득, 저중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 구분은 세계은행 기준을 따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1, Figure 1.20.

- (노동시장) 전 세계 노동시장은 향후 2년간 점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그림 1-10] 참고)
 - (고용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고용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낮은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
 - (노동시장 참여율) 일부 국가에서는 대유행 초기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떠났으나 감소한 노동시장 참여율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의 초기 급락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림 I -10] 개선되고 있는 노동시장



4. 주요 위험 및 취약성

■ 팬데믹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음

- (상방위험)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신뢰도와 소비자기업의 지출이 향상되고 가계 저축이 완화되면서 경제전망이 개선될 것임
 - 세계 생산량은 팬데믹 이전에 예상했던 추이로 돌아가고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할 것임
 - 동시에 수요가 강해지면서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일부 신흥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하방위험) 백신 보급이 더디고 기존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코로나19 변이 전파를 막는데 한계가 발생한다면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게 되거나 추가접종 캠페인이 필요하게 될 것임
 - 더욱 엄격한 봉쇄 조치가 재개될 수 있고, 저소득 국가는 백신 보급 부진이 계속될 수 있으며, 생산량과 1인당 소득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임
 - 주요국의 폐쇄는 공급 및 운송 시간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 제한 및 항구 폐쇄는 세계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소비자 물가는 2022년 1사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OECD 회원국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5%, 주요 선진국은 3.5%로 예상되고, 2023년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에너지 비용 급증, 공급 부족, 높은 운송 비용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
- 장기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 광범위한 가격 인상 등과 함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주요 중앙은행들은 더 일찍, 더 큰 규모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것임
 - 팬데믹이 다시 악화되면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수요가 다시 이동하면서 병목현

상이 발생하고 공급에 제한이 생겨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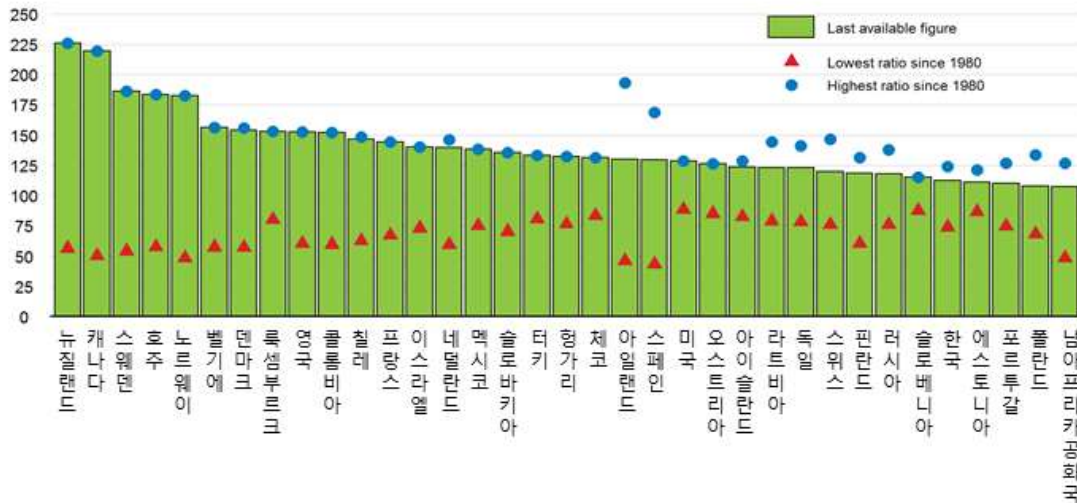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보통 기간이 짧고 적은 수의 항목에서 일어나지만, 상승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광범위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점진적인 긴축은 예측 기간 동안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음
 -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 생산국의 수출 수익이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에너지 수입자의 소비 성향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생산자의 소비 성향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순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 NiGEM 매크로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 1사분기부터 세계 석유, 가스 및 석탄 가격이 3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위험 재조정(risk repricing)을 통해 기업 부문과 신흥국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우, 회복력은 있으나 취약성은 증가하고 있음
 - 대체로 금융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채권 발행 강세, 주택시장 추이 등으로 취약성이 높아짐
 - 국가, 비금융 기업 및 금융회사 채권 발행이 2021년 매우 강세를 보임
 - 주택수익비율³⁾을 보면, 자산의 가치가 매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I-11 참조)
 -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현재의 취약성은 기업 부문에 더 집중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을 제외한 가계 채무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가계 대차 대조표 또한 2007년에 비해 현재가 더 양호한 상황
 - 반면, 글로벌 기업 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

3) price-to-rent ratio: 임대료 대비 실제 주택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매매가격을 연간 임대료로 나누어 산출

[그림 I -11] 국가별 주택수익비율(분기, 장기평균=10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27

○ 기업 부문의 스트레스는 현재 억제되어 있으나 상승할 수 있음

- 팬데믹 이후 여러 기업에 제공된 상당 규모의 공적 지원, 신용 공급 등은 기업 파산을 억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의 높은 채무는 경제 위기 이후에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기업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전부터 존재했던 위험요인들 중 일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심화되었음
 - 전세계 비금융 기업 채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투기적이거나 가장 낮은 투자등급인 BBB로 평가되고 있음
 - 예상치 못한 성장 둔화 또는 투입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기업의 상환능력과 채무 이월 능력을 위협할 수 있음

○ 취약한 재정 상태는 여러 신흥국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됨

- 팬데믹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지출증가는 신흥국의 채무를 상당히 증가시킴
 - 신흥국의 2021년 상반기 채권발행은 1조 8천억달러로, 이는 2017~19년 상반기 평균 발행량 대비 40% 높은 수치
 - 일부 신흥국에서 민간부문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중국 부동산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팬데믹 초기 칠레의 원자재 가격 하락, 터키의 대규모 신용 보

증 및 통화 평가절하는 모두 비금융 기업 채무를 증가시킴

- 외국인 투자자의 제한된 수요와 공공채무의 증가는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기업과 가계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회복을 방해 할 수 있음
- 신흥국의 경우, 자본유입 완화, 국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상승 등으로 통화위험(평가절하)이 존재

■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 위험이 높아졌음

- 부동산 부문은 수년 동안 중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 요인이었으나, 일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금융 중개업의 위험을 초래함
 -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악화되어 채무 불이행과 부동산 가격의 상당한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중국정부는 부동산 부문과 금융 안정성 전반을 신중하게 관리할 것으로 보이나, 신용조건이 제한되고 채권 스프레드가 증가하여 이미 예측에 반영된 것 이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NiGEM 글로벌 거시경제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역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 내수 성장률이 향후 2년간 연 2% 감소하면 세계 GDP 성장률은 약 0.4%p 이상, 세계 인플레이션은 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기 침체로 다른 국가의 주요 투입재 생산이 제한된다면 세계 GDP 성장률은 0.7%p 감소하여 세계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주식 가격의 악화와 불확실성까지 동반된다면 글로벌 GDP 성장률은 연평균 1%p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되어 세계 인플레이션이 약 0.25%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됨

■ 무역 전망에 있어 코로나19의 추가 발생, 지정학적 긴장 등의 하방위험이 존재

- 코로나19의 추가적인 발생으로 인해 이동이 새롭게 제한되거나 항구가 폐쇄되는 것은 단기 무역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됨

-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018~2019년 세계 무역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요구됨
- 현재 여러 국가에서 전략적 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책 조치로 인해 무역 긴장이나 제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역 전망의 위험요인이 됨

5. 정책 제언

■ (보건정책) 생명 보호와 소득 보전, 그리고 노동·제품시장에서의 공급부족 극복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도록 해야 함

- 세계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여러 저소득 국가에서 접종률이 낮게 나타남
-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여러 변이체가 계속해서 나타날 위험이 있고, 다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백신 접종에 필요한 자원 제공을 위해 ACT-A⁴⁾ 및 COVAX⁵⁾ 메커니즘의 긴급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 (통화정책) 지원정책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점차 완화되어야 함

-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상황으로, 이는 아직 회복세가 불균등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최근 몇몇 소규모 선진국들은 정책 금리를 인상했으나 대부분은 주요 정책 금리를 변경하지 않았음
 - 여러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산 보유량이 추가로 증가하였으나, 많은 중앙은행이 순매수 속도를 늦추거나 종료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물가 변동이 억제되며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고정되면 오버슈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2020년 8월, 연준은 낮은 인플레이션 기간이 지속된 후 일정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수준을 2% 이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한 바 있음
 - 2021년 7월, ECB는 대칭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⁶⁾를 채택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이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고자 함

4)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및 백신에 대한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액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5)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

6) symmetric inflation objective: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높을 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부과되는 요구 사항

-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고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가격조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버슈팅 허용기간이나 정책 정상화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함
 - 그런 점에서 연준과 여러 중앙은행은 대차대조표와 금리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긴축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강조한바 있음
-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않게 빠르게 상승하면 대안으로 장기증권의 순자산 구매를 종료하기 전에 정책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접근방식은 수익률 곡선⁷⁾이 과도하게 가팔라지지 않게 하고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자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나타낼 것임
- 통화정책의 정상화 단계는 국가마다 달리 적용해야 경기, 노동·금융시장 상황 및 인플레이션의 예상치 못한 추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향후 2년에 걸쳐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마다 속도는 다를 것임
 - 향후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우, 연준은 이제 순자산 매입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연방기금 금리는 2022년 후반부터 202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 150bps의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만히 상승하여 거의 2%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지역의 경우, ECB는 향후 2년 동안 정책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순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거나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 중앙은행은 더욱 신속하게 긴축정책을 펼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장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잘 배치되어야 하는데, 특히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주택 가격은 장기간 매우 낮은 이자율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른 상승을 지속하였음
 - 이에 담보 인정 비율⁸⁾ 또는 부채 상환 비율⁹⁾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며 필요

7) yield curve: 수익률 기간구조를 나타내기 위해 이자율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8) loan-to-value ratio: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대출의 비율을 말함

9) debt-service coverage ratio: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비율

한 경우 이는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각국의 출구전략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지 않고도 금융 상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

- 팬데믹 초기 도입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요 신흥국에서 중단된 상태임

■ (재정정책) 재정적 정책 지원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회복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 2020~21년 강력한 확장적 재정기조 이후, 팬데믹 관련 조치의 철회는 회복에 필요한 지원 유지와 자원 재분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속도와 균형을 잘 맞추어 진행되어야 함

- 2020년과 2021년 팬데믹 관련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유지되었는데, 기초재정수지를 통해 이러한 재정 확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I-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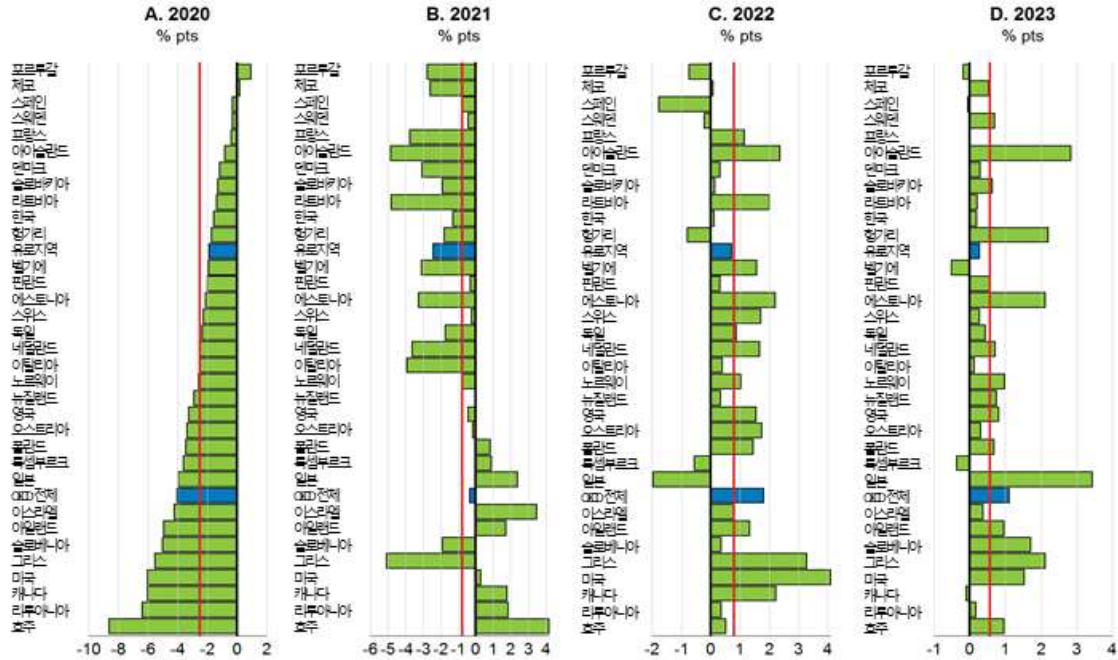
- OECD 중위(median) 경제의 기초재정수지는 2022년 잠재 GDP의 0.8%, 2023년 0.6%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2022년과 2023년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그림 I-12) 참고)

– 미국의 경우, 위기 관련 재정 지원은 대부분 철회된 상태로, 협상 중인 법안에 따른 추가 지출을 가정하더라도 향후 2년 동안 재정기조는 상당히 긴축적일 것으로 전망(2022~23년 기초재정수지는 잠재 GDP의 5% 이상 개선될 전망)

– 일본의 경우, 10월에 취임한 정부가 2021년 1차 추경과 새로운 경제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2022년 재정기조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023년에는 상당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예상됨

[그림 I -12] 국가별 재정기초(기초재정수지) 변화

(단위: 잠재 GDP 대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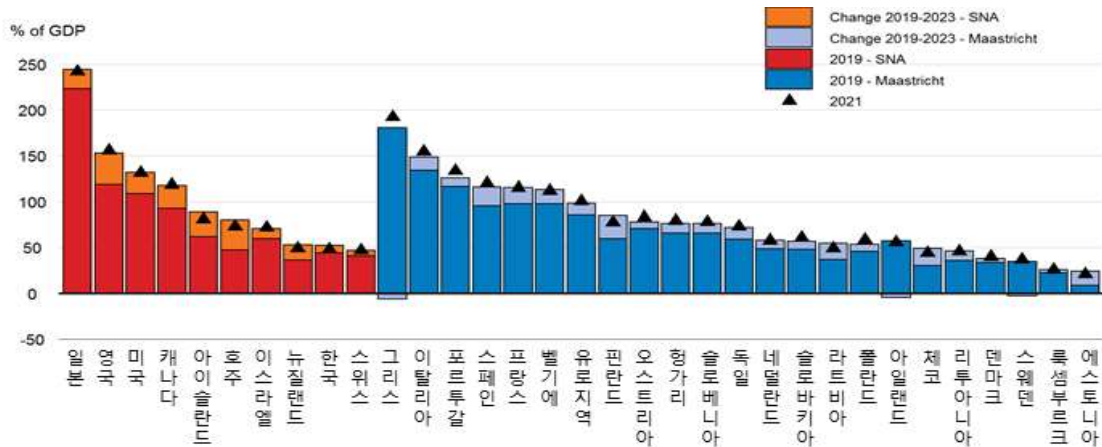


주: 수직선은 중위수(median)를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36

- 공공부채 비율은 2021년을 기점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은 2019년 수준을 상당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그림 I -13) 참고), 고령화 등과 같이 재정에 대한 미래 수요를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그림 I -13] 국가별 총부채(일반정부)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Figure 1.37

- 팬데믹 관련 지원의 종료는 경기수축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투자 강화를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때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는 시장의 신뢰와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기계획과 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변경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
- 공공지출과 수입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음
 - 민간의 저탄소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투자와 혁신 지원을 강화하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일치하지 않는 투자는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함
 -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화석연료 세금 면제 철폐 등으로 확보되는 추가 수익은 에너지 전환에 취약한 가구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신흥국과 개도국은 보건상황이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공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단계들을 미룰 수 있음
 - 그러나 일단 경기가 회복되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완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단계들을 가속화해야 함
 - 또한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는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함
- (구조정책) 회복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정책이 요구됨
 -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높이고 숙련 부족을 채우며 재배치를 촉진하는 개혁을 실시하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소득지원을 유지해야 함
 -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하면 시간제 근무나 불규칙한 근무 일정과 교육을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기준 성문화 및 시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취약성은 심각한 문제로, 장기

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의 초점은 지속 가능성과 공평한 성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함
 - 잘 설계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 회수기간이 짧은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표(고용격차 감소 및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 재생에너지 관련 지출 등을 포함
 - ** 예) 에너지 효율 건물 및 가전제품 관련 프로젝트
-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로 인해 정책 전반에 걸쳐 관련 조치가 필요함
 -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소하고, 2050년까지 최소한 순 제로에 도달해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아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막을 수 있음
 - 투명하고 참여적인 기관 설립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확립은 탈탄소화 전략의 설계 및 구현을 촉진하고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배출권 가격 책정과 표준·규정은 권장되거나 의무화된 저탄소 기술이나 제품의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II. OECD 회원국과 비OECD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1. 호주

- (COVID-19 현황 및 대응) 2021년 3분기 확진자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개된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위축됨
 - 호주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를 중심으로 2021년 3분기 COVID-19 확진자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함
 - 2020년 초에 비해 경기 침체는 더 완만했지만, 2021년 중반에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재개된 엄격한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위축됨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3.8%, 2022년 4.1%, 2023년 3.0%로 계속 회복될 전망
 - 최근 봉쇄 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계속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의 일자리 복귀에 따른 노동시장 회복은 최근 정부 지원의 일시적인 증가와 가계저축률의 점진적인 하락에 힘입어 가계소비를 촉진할 것
 - 국경의 완전한 재개방은 관광업이 재개되고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허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회복을 지원할 것
 - 유희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상승할 전망
 - 중국과의 무역관계 악화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가 축적한 많은 양의 저축은 예측에 상승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미 악화된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하방위험을 나타내며, 무역 분쟁이 악화될 경우 하방위험이 확대될 수 있음
 - 대부분의 고용관계가 최근 봉쇄 기간 중에 유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축적된 저축이 빠르게 시중에 풀리면 향후 몇 달 동안 경제가 더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음

- (재정정책) 봉쇄 조치가 재개됨에 따라 재정 지원정책이 다시 도입되었으며, 경제가 회복되고 봉쇄 관련 지원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 적자는 GDP 대비 2021년 6.7%에서 2023년 3.6%수준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엄격한 봉쇄 조치가 재개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원 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최근 예산안에서 발표된 여러 조치는 향후 몇 년 동안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
 -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에 대한 COVID-19 재난지원금(COVID-19 Disaster Payment)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금 지급 및 세금 감면,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가계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
 - 기업 및 가계 대상 세금 감면 연장, 노인 요양 및 보육 재원 증가 등 최근 예산에서 발표된 여러 조치는 향후 몇 년 동안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
- 호주중앙은행(RBA)은 경제 전망 개선과 예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정책 조정을 시작했지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
 - 2021년 11월 중앙은행은 2024년 4월의 국채 수익률 목표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
 - 2022년 상반기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에 2023년 말 정책금리를 인상할 예정
- (정책제안) 자원 재배분(reallocation)에 중점을 둘 필요
 -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직업 면허 개혁과 토지 이용 규제 변경을 포함한 자원 재배분이 촉진될 필요
 - 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목표와 기간이 명확한 중기재정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 중앙은행의 목표를 하회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새로운 통화정책 도구, 금리가 하한에 근접한 거시경제관리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호주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기에 적절한 시기임

-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은 적절하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기후전략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필요

<표 II -1>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2018/2019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9	-2.5	3.8	4.1	3.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6	0.9	2.7	2.7	2.1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2	6.5	5.1	4.7	4.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0.5	-12.3	-6.7	-5.0	-3.6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47.1	66.8	73.0	77.2	79.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0.6	2.7	4.1	3.4	3.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2. 브라질

- (COVID-19 현황 및 대응) 2021년 11월 중순 기준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되었으나 공급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
 - 2021년 11월 중순까지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접종 속도로는 연말까지 성인 인구 전체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
 -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되었으나, 공급 병목 현상이 산업 생산 회복을 방해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도매 무역, 소매 판매, 서비스의 회복세가 타격을 받고 있음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에는 5%로 전망되나 2022년에는 1.4%, 2023년에는 2.1%로 둔화될 전망
 -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성장모멘텀이 회복될 전망
 -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2022년에 회복 속도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
 -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고용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하락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지원하고 민간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
 -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기업 심리가 개선되면서 민간투자도 2022년 말 회복될 전망
 - 수출은 글로벌 회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
 - 수력발전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성장 전망치 하락,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재정위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치 하락과 투자 증가율 감소 등 하방위험도 존재
- (재정정책) 재정위험이 증가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채무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복지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세 도입 등 세제 개혁을 제안

- 정부 기관이 개인 및 비금융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GDP 대비 1% 규모로, 정부는 2022년 해당 채무의 일부만 상환 후 나머지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며 향후 지출 준칙을 준수할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
-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가속화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금리를 대폭 인상할 전망
- (정책제안) 재정개혁은 회복을 지원하고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지출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
 - 지방재정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강화하면 채무상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신뢰 및 민간투자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재정개혁은 노동 및 제품시장 개혁을 수반할 필요
 - 정규직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재설계해야하며, 보다 경쟁 친화적인 규제는 생산성, 수출 경쟁력,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은 기후관련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것

<표 II -2> 브라질 경제 및 재정전망

	2000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4	-4.4	5.0	1.4	2.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7	3.2	7.8	5.1	3.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¹	-5.8	-13.6	-7.8	-7.0	-6.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¹	-3.5	-1.7	-0.5	-0.8	-0.7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3. 중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COVID-19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국경 개방을 서두르지는 않을 예정
 - 10월 말 기준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엄격한 국지적 봉쇄, 대량검사, 대량격리 조치를 통해 산발적인 발병이 억제됨
 - 하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무증상 보균자의 높은 비율을 고려할 때 국경 통제는 장기적으로 COVID-free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
- (경제전망) 경제회복으로 2021년 경제성장률은 8.1%에 도달할 전망이나, 2022년과 2023년에는 5.1%로 둔화될 전망
 - 2021년에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나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귀할 것
 - 특별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사업이 선행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
 -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더욱 가속화되면 은행, 신탁회사, 기타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산발적인 바이러스의 발생이 계속되어 소비가 제한될 것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목표치를 하회할 것
 - 산발적인 발병이 계속됨에 따라 위생상황이 하방위험으로 남아있으며, 과도하게 확대된 부동산 부문에서의 신용 위험 및 무질서한 부채축소(deleveraging)는 소규모 은행과 그림자 금융기관(shadow banking institution)의 파산을 유발할 수 있음
 -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하나 장기적인 환경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며, 다수 국가와의 무역 분쟁은 무역 및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내포함
- (재정정책) 통화 정책은 중립을 유지하고 보다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제공될 것

- 통화정책은 대규모 완화는 자제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동성을 보충하는 등 중립을 유지할 것
- 기업 채무는 GDP 대비 160%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채축소가 계속되어야 함
- 대부분의 부문에서 회복세가 강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원을 감소할 것이나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보장기여율 적용 등 일부 지원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

■ (정책제안) COVID-19 위기를 주요 개혁을 시작할 기회로 전환할 것

- COVID-19 위기를 경쟁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 여기에는 민간 및 외국 기업의 진입·관리에 대한 제한 완화, 국유 기업 및 공공기관의 특권, 정부의 암묵적 보증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
 -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적 권리를 주로 나타내는 행정독점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체해야 하며,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과 경쟁중립성 준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개혁은 성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함
 - 지속적인 전력 부족으로 인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며, 탄소중립국으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필요

<표 II -3> 중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6.0	2.3	8.1	5.1	5.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9	2.5	0.8	1.7	2.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¹	-3.7	-6.9	-6.4	-6.0	-6.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¹	0.7	1.9	1.7	1.5	1.5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4. 유로 지역

- (COVID-19 대응) EU 인구의 약 75%가 11월 중순 기준 최소 1회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특정 지역에서 봉쇄 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있음
 - 2020년 12월에 시작된 백신 접종은 유럽 전역에서 속도를 내고 있어 EU 인구의 약 75%가 11월 중순 기준 최소 1회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국가별 접종률 편차가 크며 동유럽에서는 여전히 감염의 우려가 있음
 - 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경제전망) 2021년 GDP 성장률은 5.2%로 강하게 반등한 후, 2022년에는 4.3%, 2023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
 - 민간소비 및 투자는 봉쇄 조치 해제와 가계 지출 증가로 인해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2022년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 2023년에도 그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며, 지속적인 임금상승 압력이 없다면 2022년 말 인플레이션은 2%를 하회할 전망
 - 유로 지역 이외 국가의 회복에 따른 강력한 수출 성장으로 인해 2021년 유로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를 크게 상회할 전망
 - 3차 접종 및 접종 거부,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으로 인한 새로운 봉쇄 조치 시행 가능성, 지속적인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존재
- (재정정책)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전환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
 - 인플레이션이 2023년 말까지 2% 미만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고 다른 선진국의 정책 정상화라는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ECB 정책은 과도한 통화 긴축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 정책금리는 2022년과 2023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
 - 자동안정화장치 작동 외에도 정부는 2021년 유로지역 GDP의 2%p 이상의 재량

적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예외적인 지원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추진될 전망

- (정책제안) 경제 정책은 부문별 자원 재배분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할 필요
 -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선별적인 긴급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투자를 위해 회복·복구수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¹⁰⁾이 특히 중요
 - 연구 및 혁신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투자는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필수 정책 수단
 - EU 집행위원회는 경기회복을 방해하거나 녹색 투자에 대한 수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¹¹⁾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제회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조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 디지털화, 환경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개혁에 집중할 필요

<표 II -4> 유로지역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6	-6.5	5.2	4.3	2.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2	0.3	2.4	2.7	1.8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6	7.9	7.7	7.2	7.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0.6	-7.2	-6.7	-3.8	-2.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03.1	120.9	122.0	120.4	119.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3.0	2.7	3.4	3.1	3.3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0) 회복·복구수단(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EU 차원의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2026년까지 EU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재정 지원을 제공.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8월호 재정동향』, 2021.9.1.

11)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유럽연합(EU)의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가입국의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GDP 대비 3%, 일반정부 채무 상한선을 GDP 대비 60%로 정하고 있는 협약

5. 프랑스

- (COVID-19 현황 및 대응) 백신 접종의 가속화와 COVID-19 확진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가 강하게 반등함
 - 백신 접종의 가속화와 COVID-19 확진 규모 감소에 따라 당국은 여름철 위생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강하게 반등함
 - 내수 수준이 2021년 2분기~3분기 동안 3.8% 증가하였으며, 일부 부문의 신규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어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함
- (경제전망) GDP 성장률은 2021년 6.8%로 반등한 후 2022년 4.2%, 2023년 2.1%로 성장세가 완만해질 전망
 - 국내 수요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나, 억눌린 수요가 완화됨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고용 개선으로 인해 임금 및 근원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교역 상대국 수요의 빠른 반등과 운송 장비 부문의 공급 병목 현상 완화로 수출 실적이 개선될 전망
 - 지속적인 공급 병목 현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및 세계적인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높은 채무와 유로 지역 주요 교역 상대국의 느린 회복이 프랑스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재정정책) 긴급 재정 조치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회복 및 투자 계획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
 - 1,000억 유로 규모의 중기 회복 계획인 프랑스 릴런스(France Relance)와 2030년 투자계획(the 2030 investment plan, 2027년까지 300억 유로)의 시행으로 2021년 GDP의 1.5%, 2022-23년 연간GDP의 약 1.3% 규모의 재량지출이 이어질 예정
 - 인프라 및 디지털화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105억 유로 규모의 사업세 감면과 고용 보조금이 기업과 일자리를 지원
 - 친환경적인 대안을 목표로 하는 가구 대상 자동차 및 에너지 투자 보조금은 내구

재 소비와 주택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미 계획된 주택 및 법인 소득세 인하와 건강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계 소득과 사업이익을 지원할 것

○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총수요를 지원할 예정

-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s)¹²⁾은 프랑스(4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와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회복 정책을 지원하여 국내의 수요를 촉진할 것

■ (정책제안) 회복 계획과 구조 개혁은 장기 성장을 촉진 할 것

○ 프랑스의 회복 계획과 2030년 투자 계획은 균형 잡힌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팬데믹의 전개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유지될 필요

○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기업 총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핵심과제

○ 경기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 지출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기 재정전략을 확실하게 실행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중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필요

- 지출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지출 배분을 보장하는 강화된 재정체계를 구축할 필요

<표 II -5>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14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8	-8.0	6.8	4.2	2.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3	0.5	2.1	2.3	1.4
실업률(unemployment rate) ^{1,2)}	8.5	8.1	7.8	7.6	7.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3.1	-9.1	-8.0	-4.9	-3.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123.5	146.5	146.4	146.4	146.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0.3	-1.9	-1.0	-2.0	-1.6

주: 1. national unemployment rate, includes overseas departments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2)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s): 2020년 7월 17~2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7,500억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6. 독일

- (COVID-19 현황 및 대응) 10월 중순 이후 접종 진행이 늦어지는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팬데믹이 경제를 계속 압박하고 있음
 - 11월 중순 기준 인구의 약 67%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계속되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경제전망) GDP는 2021년에 2.9%, 2022년에 4.1%, 2023년에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민간 소비는 COVID-19 확진 규모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나, 2022년에는 억눌린 수요, 강력한 노동 시장 및 서비스 부문의 점진적인 활동 정상화에 의해 증가할 전망
 -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COVID-19 확진 규모의 증가는 민간 소비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 요구와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은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반면, 공급 제약이 빠르게 완화될 경우 수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재정정책) 재정정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음
 - 단기근무제 확대 등 COVID-19의 주요 재정지원 조치는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경제 정책의 초점이 회복으로 전환될 것
 - 유럽중앙은행(ECB)의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충수요를 지원할 것
 -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s)의 보조금은 기후 변화 해결, 디지털화 강화, 의료 강화, 투자 장벽 감소에 사용될 것이며 보조금의 약 절반 규모가 2023년까지 사용될 예정

- (정책제안)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고용 전환을 지원할 필요

- 인프라 투자 강화는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
- 단시간 근무제의 종료는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을 장려할 것이나 보다 많은 가계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고용훈련 강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임금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

<표 II -6>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1	-4.9	2.9	4.1	2.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4	0.4	3.1	2.8	2.2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3.2	3.9	3.6	3.2	3.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5	-4.3	-4.9	-2.3	-1.3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67.4	78.8	82.8	82.0	81.7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7.6	6.8	6.8	6.1	6.2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7. 인도

- (COVID-19 현황 및 대응) 2021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상화 모멘텀이 중단됨
 - 중환자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했으며, 제한적으로 봉쇄 조치가 다시 도입됨
 - 백신 보급이 1월에 시작되었으며, 9월 말까지 대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1회 접종을 받았고, 11월 중순에는 4명 중 1명 이상의 인도인이 백신접종을 완료함
- (경제전망) GDP는 2021~22 회계연도에 9.4% 성장한 후, 2022~23 회계연도에는 8.1%, 2023~24 회계연도에는 5.5%로 완화될 전망
 - 백신 접종의 증가 속도와 인플레이션 둔화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고용 및 소득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계소비 회복을 둔화시킬 것
 - 2023~24 회계연도의 경제 전망은 새로운 기계 사업 투자 등 주요 성장 요인에 대한 COVID-19의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 악화될 전망
- (재정정책) 팬데믹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재정 지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구조개혁이 경기 회복을 강화할 것
 - 비정규직 근로자, 이민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 팬데믹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재정 지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
 - 2022년 정책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좀비기업 퇴출과 효과적인 부실채권(NPLs) 해결이 용이해질 것
 - 2020~21년에는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 보험 및 항만 자유화를 포함한 중요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법안의 꾸준한 이행을 우선시해야 할 것
 -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고 다면적인 개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 (정책제안) 빈곤 퇴치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
 - COVID-19 위기 동안 구조개혁을 시작한 추진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쟁 등 다른 분야로 확장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열린 대화로 이를 유지할 필요

<표 II -7> 인도 경제 및 재정전망

	2011/2012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4.0	-7.3	9.4	8.1	5.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4.8	6.2	6.4	4.8	4.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2,3}	-6.9	-7.1	-6.9	-6.6	-5.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0.8	0.9	-0.6	-1.6	-2.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Gross fiscal balance for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8. 이탈리아

- (COVID-19 현황 및 대응)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입원율은 낮으며, 50세 이상 인구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함
 -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부분 지역의 입원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
 -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0세 이상 인구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70세 이상의 1/4 이상이 부스터 샷을 접종
 - 현재 모든 근로자는 백신 접종, 면역, COVID-19 검사 음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함
- (경제전망) GDP 성장률은 2021년에 6.3%로 강하게 반등한 후, 2022년 4.6%, 2023년 2.6%로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 GDP 성장률은 재정부양책의 점진적인 철회에 따라 둔화될 전망이나 전망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
 - 수요, 개혁 시행, 투자 인센티브 신뢰 유지 등으로 민간 투자도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관광 및 세계적인 공급망 제약이 꾸준히 완화되어 수출 성장을 유지할 것
 - 고용의 점진적인 증가, 재정정책 지원, 신뢰 상승, 서비스 활동에 대한 COVID-19 관련 제한 완화로 가계 소비가 증가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나 근원 물가는 전망 기간 동안 상승할 전망
- (재정전망) 재정정책은 지원정책을 유지
 - 2022년 가계에 대한 COVID-19 소득 지원 감소는 보편적 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 개선과 의료비 지출 증가로 상쇄
 - 중소기업보증기금을 통해 2021년 이후에도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며,

세제 개혁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세 격차(labour tax wedge)¹³⁾ 감소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

- 현재의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조금의 시스템 요금을 인하하고 가스에 대한 VAT 부가가치세율을 5%로 낮췄으며, 빈곤 가구에 대한 기존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함

■ (정책제안)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시행이 필요

- 회복세가 계획대로 확고해지면 재정정책 지원을 점차 줄여나갈 필요
-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한 지속적인 가계 지원과 조세 및 사회안전망 개혁은 회복을 지속하는데 중요함
- 중기적으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지출을 지속할 필요

<표 II -8>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4	-9.0	6.3	4.6	2.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6	-0.1	1.8	2.2	1.6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0.0	9.3	9.6	8.9	10.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5	-9.6	-9.4	-5.9	-4.3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55.7	183.9	182.7	178.6	176.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3.2	3.5	3.1	3.0	3.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3) 조세격차(Tax Wedge) : 고용자의 인건비와 그에 대응하는 피고용자의 순 임금의 차이를 의미. 개인소득세, 고용자 및 피고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지불급여세의 합계에서 피고용자의 받는 혜택을 뺀 금액을 인건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여 계산, 출처: OECD, Taxing Wages2021, 2021.4.29.

9. 일본

■ (COVID-19 현황 및 대응) 봉쇄 조치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 반등할 것

-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급증으로 인한 4차 비상사태의 도입 및 확대로 올해 중반 소비 회복이 지연되어 3분기 GDP가 하락
- 이후 빠른 백신 접종으로 위생 상황이 개선되면서 10월부터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수의 국가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음

■ (경제전망) GDP 성장률은 2021년 1.8%, 2022년 3.4%, 2023년 1.1%로 경제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나 여전히 위험이 존재

- 가계 보조금과 여행 장려 캠페인 재개 등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시행으로 봉쇄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 민간 소비가 회복을 지속할 전망
- 현재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역 상대국들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수출도 꾸준히 확대될 것이며, 국내 소비와 기업 투자 회복세를 반영하여 수입도 증가할 전망
- 노동 시장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나 임금인상률이 단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

■ (재정전망) 재정 및 통화정책은 지원정책을 유지

- 일본 새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임원 수용력 확대, 피해 가구 지원 지속,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문 육성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이 패키지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재분배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됨
 - 총 추가 정부 지출은 약 50조엔(2020년 GDP의 9.2%)으로, 2022년과 2023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
- 통화정책은 수익률 곡선 통제(YCC: yield curve control)¹⁴⁾로 장기 금리를 0% 수준

으로 유지하면서 완화적 기조를 지속함

- 일본은행은 또한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기간을 2022년 3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으며, 금리 차이를 인센티브로 하여 녹색 사업에 대출 및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도입하기로 함

■ (정책제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가 개혁이 필요

- 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며 보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
- COVID-19 백신 및 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출은 국가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인구 고령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지속과 직업 훈련 및 교육 강화가 중요
- 디지털 혁신은 위생 충격에 대한 회복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디지털화에 대한 R&D 투자 증가와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은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정부 채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므로, 경제 회복이 궤도에 오르면 사회보장 및 조세 제도 개혁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

14) 수익률 곡선 통제(YCC: yield curve control) : 일본은행이 2016년 9월 도입한 「장단기금리조정 양적·질적금융완화」의 정책 중 하나로 물가 안정 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물가·금융 정세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익률 곡선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 2021년 3월 기준 단기 정책금리를 '-0.1%', 10년 만기 국채 금리 조정 목표를 약 '0%' 수준으로 하는 '금융시장조절방침'에 따라 적절한 수익률 곡선 형성을 촉진하고 있음. 출처: 일본중앙은행(BOJ),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완화 실시를 위한 점검(より効果的で持続的な金融緩和を実施していくための点検)', 2021.3.19.

<표 II -9>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0	-4.6	1.8	3.4	1.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0.5	0.0	-0.2	0.8	0.8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2.3	2.8	2.8	2.6	2.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2.9	-9.5	-6.4	-6.9	-3.1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223.0	237.3	242.0	243.4	244.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3.4	2.9	3.2	2.5	2.5

주: 1.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seasonally adjusted quarterly indices for each year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0. 한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제한이 완화됨

-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가 7월부터 시행되어 고객 대면 서비스의 회복이 지연되고 3분기 성장을 제한함
-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0%가 11월 2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사업 운영 및 개인 모임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2021년 4%로 반등한 이후 2022년에는 3%, 2023년은 2.7%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

- 거리두기 조치와 지원정책의 점진적인 완화는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소비와 고용을 촉진할 것
- 수출 성장은 IT 제품, 기계 및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강한 세계적 수요에 힘입어 2023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납품 지연을 초래하는 공급 병목 현상과 부족으로 일부 수출이 계속 부진할 수 있음
- 기업 투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와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 계획으로 인해 강한 성장이 예상됨
-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재정전망) 통화정책은 정상화가 시작되었으며, 재정지원 정책이 유지될 것

- 정부는 올해 총 50조원(연간 GDP의 2.6%)의 두 건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도입하는 등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계속해서 지원
 - 여기에는 현금급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
- 2022년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원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예산에 12조원을 배정함
- 일반 정부 적자는 2021년에 GDP 대비 약 3%, 2022년에는 GDP 대비 약 2.5%로 예상되며,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3년까지 GDP의 약 52%로 증가할 전망

- (정책제안)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 지속이 필요
 -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보다 선별적이고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 경제가 회복되면 공공투자는 뉴딜 정책의 기초에 따라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경제를 녹색화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독려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
 - 통화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며, 가계부채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건전성 정책이 필요
 - 또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

<표 II -10> 한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2	-0.9	4.0	3.0	2.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0.4	0.5	2.4	2.1	1.5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3.8	4.0	3.6	3.1	3.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1.0	-2.3	-2.9	-2.5	-2.1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44.2	45.4	47.8	49.2	52.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3.6	4.5	5.0	4.4	4.3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1. 네덜란드

- (COVID-19 현황 및 대응)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 경제 회복을 지원
 -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신규 확진, 입원, 사망 간의 연관성이 약화됨
 -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완화되었지만, 10월 중순 이후 확진 규모가 증가하여 11월 13일부터 강화된 봉쇄 조치가 재도입

- (경제전망) 네덜란드 경제는 2021년에 4.3% 성장하여 2021년 말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한 후, 2022년에는 3.2%, 2023년에는 1.8% 성장할 전망
 - 소비는 고소득 가구 중심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저축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성장을 촉진시킬 것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 병목 현상, 탄력적인 내수 및 기저 효과로 인해 2022년 초 약 3.7%로 높게 유지되다가 공급망 문제가 사라지고 내수가 안정되면서 점차 둔화될 전망
 - 현재보다 더 엄격하고 긴 봉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COVID-19 확진 규모 증가가 계속될 경우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전망)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재정지원 조치가 완화될 것
 - COVID-19 관련 주요 재정지원 조치가 2021년 9월 말에 종료되었으며, 11월 13일 도입된 새로운 봉쇄 조치에 따라 발표된 새로운 COVID-19 관련 기업 지원 정책도 2022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는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와 강력한 경제성장을 반영하여 2021년 GDP 대비 5.9%에서 2023년에는 GDP 대비 1.4%로 감소할 전망

- (정책제안)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
 - COVID-19 위기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선별적인 재정정책

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

- 국가성장기금(The National Growth Fund)과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s)은 경기부양을 위한 향후 공공투자의 원천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필요

<표 II -11> 네덜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9	-3.8	4.3	3.2	1.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2.7	1.1	2.4	3.1	1.7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3.4	3.8	3.4	3.5	3.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1.7	-4.2	-5.9	-2.7	-1.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62.4	69.8	73.1	73.6	73.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9.4	7.0	8.5	8.9	9.0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2. 남아프리카공화국

-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바이러스 확산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11월 중순 기준 인구의 34%가 백신 접종을 완료함
 - 매일 새로운 확진이 100건 미만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교통 수단, 사무실,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등 경보 수준을 최저 수준으로 설정
 -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었으나, 11월 중순 현재 성인 인구의 34%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함
- (경제전망) 팬데믹이 억제되고 더 이상 엄격한 봉쇄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GDP 성장률은 2021년에는 5.2%로 반등한 후 2022년 1.9%, 2023년 1.6%로 둔화될 전망
 - 성장의 주요 동력은 가계 소비와 투자에 의해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될 것이며, 가계소비는 노동시장 개선, 신용수준 지속, 정부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강세를 유지하고 민간 투자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할 필요
 - 전력회사에 의한 부하 차단 증가, 예상보다 높은 전기요금에 단기적으로 성장이 방해될 수 있으나, 상품 수출에 대한 수요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성장이 촉진될 것
- (재정 전망)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
 -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재정정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적절함
 - 제한적인 재정여력에도 불구하고 COVID-19 관련 일부 보조금을 재도입하고 대부분의 지원조치가 2021년 몇 개월 동안 연장되었으나, 올해 말 이전에 중단될 예정
- (정책제안) 투자와 성장의 핵심은 신뢰 회복

-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생산에 대한 과감한 정책 조치가 필요
- 보다 나은 거버넌스와 민영화를 통해 도산한 국영기업을 복구하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 이전이 줄어들고 공공 재정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
-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된 일자리가 회복될 때까지 COVID-19 관련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은 가계소비와 성장을 지원할 것

<표 II -12>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0.1	-6.4	5.2	1.9	1.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4.1	3.3	4.4	4.8	4.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5.7	-11.6	-7.8	-6.1	-5.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2.6	2.0	4.9	1.2	-1.1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3. 스페인

■ (COVID-19 현황 및 대응) 봉쇄 조치의 해제로 회복이 가속화됨

- 빠른 백신 접종률(전체 인구의 80%가 11월 중순에 백신 접종 완료)과 확진 규모 감소 덕분에 지역 당국은 제한을 더욱 완화하여 서비스 부문의 추가 재개가 가능해짐
- 이로 인한 서비스 활동 및 신뢰 지표의 강력한 개선으로 회복세가 광범위해졌으며, 3분기 GDP는 2% 성장함

■ (경제전망) GDP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지원을 받아 2022년에는 5.5%, 2023년에는 3.8% 성장할 전망이며, 내수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

- 억눌린 수요와 서비스 부문 재개에 따른 민간 소비의 강력한 회복은 2022년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며,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s)은 민간 투자를 지원할 것
- 하방 위협에는 팬데믹의 재발, 최종 가격과 임금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증가, 실업률 및 지급 불능 증가의 지속적인 영향 등이 있음

■ (재정전망)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규모 정책 지원을 유지

- 2022년 예산에는 270억 유로의 EU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s)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0%를 에너지, 인프라 및 환경 투자에 배분
- 단시간 근무제와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2022년 2월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소비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 감세 조치와 가격상한제를 도입

■ (정책제안) EU 기금 및 구조 개혁의 효과적인 사용은 장기적인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좋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개혁 시행을 통해 EU 기금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하며, 혁신적인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이전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

- 포괄적인 회복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기술과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시할 필요
- 공공채무가 높은 수준으로 회복세가 확고히 진행될 경우 재정건전화를 시행해야 하며, 연금 개혁은 재정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 균형을 이룰 필요

<표 II -13> 스페인 경제 및 재정전망

	2015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1	-10.8	4.5	5.5	3.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0.8	-0.3	2.9	3.2	1.5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14.1	15.5	15.0	14.2	13.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2.9	-11.0	-8.1	-5.4	-4.2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117.7	147.6	147.8	144.8	143.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2.1	0.8	0.6	1.0	1.2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4. 영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백신 접종 진행이 회복을 지원함

- COVID-19 백신의 빠른 초기 보급은 신규 COVID-19 확진, 입원, 사망 간의 연관성을 약화시켜 경제의 광범위한 재개를 가능하게 함
- 영국에서는 7월 19일 거의 모든 COVID-19 관련 봉쇄 조치가 해제되어 나이트클럽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행사 및 공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
- 위생 및 거리두기 지침이 유지되며,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3차 유행에 대비하고 10월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스터 샷을 제공하고 건강한 12~15세까지 백신 접종 제안을 확대

■ (경제전망) GDP는 2021년에 6.9% 성장한 후 2022년에는 4.7%, 2023년에는 2.1%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소비는 성장을 계속 뒷받침하지만 정부 지원이 감소하고 가계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를 체감함에 따라 둔화될 전망
- 노동 시장 긴축이 계속됨에 따라 실업률은 2023년에 4.2%로 점차 감소할 것이며, 노동력 부족은 임금 압박을 가중시키지만 지속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공중 보건 문제, 예상보다 높은 상품 및 에너지 가격, 공급 및 노동력 부족, 정책 금리 인상, EU와의 무역 관계 악화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전망) 주요 재정지원 조치가 종료될 것이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할 전망

- 주요 재정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지원 조치에 대한 지출은 2022년에 대부분 사라질 것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동결하고 국민보험기여금을 인상하는 2022년과 법인세 인상이 예정된 2023년에는 정부가 증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 긴축이 예상됨

- 일반 정부 적자는 2022년 GDP의 5.4%, 2023년 GDP의 4%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공급 및 노동력 부족, 연료·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기적으로 물가 목표치를 위해 정책금리를 0.1%에서 0.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할 전망
- (정책제안)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할 필요
-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징후가 분명한 가운데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긴축할 필요
 - 재정지원 정책을 유지해야하며, 기술·재교육 및 직업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육아에 대한 자기부담비용을 더욱 삭감할 필요
 - 정부는 탄소중립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음
 - 공공투자는 주거 난방 개선과 영국의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필요

<표 II -14>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9 prices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7	-9.7	6.9	4.7	2.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¹	1.8	0.9	2.4	4.4	2.4
실업률(unemployment rate) ²	3.8	4.5	4.5	4.3	4.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2.3	-12.9	-9.1	-5.4	-4.0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118.5	154.4	155.6	153.6	153.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³	-2.7	-2.6	-2.8	-3.5	-3.5

주: 1.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

15. 미국

- (COVID-19 현황 및 대응) 경제 활동이 다시 가속화되었으며,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COVID-19 확진자 급증과 공급 차질로 3분기에 성장세가 완만해진 후 10월 소비 지출과 산업생산 지표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등 경제 활동이 다시 가속화됨
 - 전체 백신 접종 대상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60% 안팎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 (경제전망) 실질 GDP는 2021년에 5.6% 성장한 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7%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 전망
 - 최근 공중 보건 상황의 개선이 서비스 소비와 노동 시장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며, 공급 차질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기업의 재고 재구축과 강력한 소비 성장을 촉진할 것
 - 자동차 관련 공급 부족의 점진적인 완화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최근 주택 임대료 및 운송료 인상,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이상을 유지할 것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COVID-19 확진 규모의 증가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전망) 팬데믹 관련 재정지원 정책은 대부분 만료되고 물리적 인프라 관련 장기 공공 지출 계획이 시행될 예정
 - 2020년과 2021년 초에 발표된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는 대부분 만료되었으나, 조기 경기부양책,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급여 보장범위 확대에 의해 상당한 규모의 저축이 축적되어 경제 회복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
 - 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장기 공공 지출 계획은 수송망, 광대역 업그레이드, 전력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 새로운 조세 조치로 대부분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이

러한 장기 지출 계획으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모두 GDP의 약 0.3%가 추가 지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통화정책은 거의 0%에 가까운 연방 기금 금리와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 등 매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나, 월별 자산 매입을 축소할 예정이다

■ (정책제안) 새로운 인프라 지출 계획은 강력한 거버넌스와 결합될 필요

- 인프라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선택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의 관할권 간 파급효과와 원격 근무 등 팬데믹 발생 이후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신중한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해야 하며, 인프라의 우선순위는 환경 및 기후 대책과 연계할 필요
-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전력 생산에서 재생 가능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환경외부효과에 대한 강화된 가격 책정은 배출 저감을 더욱 촉진할 것

<표 II -15>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12 prices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3	-3.4	5.6	3.7	2.4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3.7	8.1	5.4	3.8	3.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6.4	-15.4	-12.5	-7.2	-5.5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08.5	133.9	131.2	131.3	132.1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²	-2.2	-2.9	-3.6	-3.8	-3.9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1